

'감사포럼' 상임감사 70%가 정치권 출신

61명 중 43명... 감사원 출신은 8명 불과

최근 문제가 됐던 '감사 포럼' 소속의 상임감사들 가운데 정치권 관련자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알리오 시스템'에 따르면 '감사 포럼' 소속 공공기관 감사들의 주요 경력은 이렇게 조사됐다. 감사포럼 소속 감사는 모두 82명이며 이중 상임감사는 61명, 비상임감사는 21명으로 집계됐다.

상임감사 61명 가운데 정치권과 관련된 인물은 43명으로 70.5%를 차지했다. 또 감사원 출신은 8명이었다. 회계법인·의료·시민단체·언론·기업·금융 출신 등 민간분야 출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상임감사의 거의 대부분이 정치인·공무원·군인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비상임 감사 21명 가운데 정치권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 비상임 감사의 대부분은 변호사, 회계사·연구원 등이었다. 비상임 감사는 상임감사에 비해 급여가 적은 편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감사포럼은 작년말에 상임 감사 위주로 구성했으며 비상임 감사들은 희망하면 가입이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감사포럼 회원의 대부분은 규모가 큰 대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들"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인사의 투명성 절차가 수립되면서 낙하산 논란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공공기관운영법 이 시행되면서 공기업 감사는 임원추천위-공공기관운영위-기획처장관 제청-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준정부기관 감사는 임원추천위-공공기관운영위-기획처장관 임명의 경로를 거쳐야 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비상임이사들이 주도하는 임원추천위와 민간인사들이 많은 공공기관 운영위 등에서 낙하산인사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낙하산인사 시비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균발위 남미연수 취소 서울 구청장들은 강행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혁신 해외정책연수 명목으로 산하 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남미여행을 추진하다가 공기업 감사들의 남미 '외유' 파문 여파로 인해 '부적절하다'고 판단,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간택회 국가균형발전위 비서관은 이날 '지역혁신 세미나' 명목으로 이달 말 남미 방문 일정을 추진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 업무와 맞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왔다"며 "그러나 행사 취지와 프로그램 성격의 적합성 문제를 검토한 끝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5명의 기초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지역혁신 전문가 3명, 균형발전위·행정부·기초단체 실무공무원 10명 모두 18명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공기업 감사단과 마찬가지로 남미로 출국한 서울시내 일부 구청장들은 방문 일정을 '강행'하기로 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일 서울시내 자치구들에 따르면 12~23일 브라질 등 남미 4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11일 출국한 7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남미 방문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방문 일정을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미를 방문중인 구청장 등은 서울 은평, 성동, 동대문, 도봉, 마포, 관악, 송파 등 7개 자치구 구청장들이며, 구민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을 미뤘던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18일 출국해 칠레에서 합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남미 '외유' 감사 어떻게 처리되나

법적 하자 없어 해임·경비 환수 어려울 듯

정부는 남미로 여행을 떠났던 공공기관 감사들이 17일 귀국하면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들 감사의 남미 여행을 도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하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감사들이 돌아오면 남미 여행 추진 과정, 구체적인 여행 코스 등을 파악해 향후 어떻게 처리할 지 검토할 계획이며 현 단계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 감사에 대한 조치는 ▲해임 ▲경비 환수 ▲연임 불허 ▲경정평가에 반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해임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는 '기획처 장관은 비상임이사 및 감사가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 직무를 이행하

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하면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회계감사와 경영감사 등 본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남미여행을 떠났다고 해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획처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물론, 도덕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해임의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과수 포퓰를 방문하는 일정이 평일이 아닌 주말에 잡혀 있었고 공공기관 방문 일정도 적지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여행이라고 무조건 매도하기도 힘들다. /연합뉴스



담소하는 메르켈과 사르코지

16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 독일을 찾은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총리 관저에서 공식 환영 행사 직후 사진기자들을 가리키며 담소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DJ, 베를린 자유대 '자유상' 수상

베를린 선언으로 남북 전쟁 해체·6자회담 초석

김대중 전 대통령이 16일 베를린 자유대학이 제정한 '자유상'을 수상했다.

김 전 대통령은 베를린 자유대학 강당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지난 2000년 3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촉구하는 소위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고 밝히고 바로 이곳,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행한 '베를린 선언'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의 길을 열었고 6자회담을 성사시키는 단초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6자회담은 오랜 정체와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2월 13일 마침내 성공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며 올해와 내년에도 걸쳐 이런 합의들이 실현되면 한반도에는 완전한 평화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김 전 대통령은 전망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은 더 이상 핵을 고집할 명분도 없어졌고, 필요성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 버티



김대중 전 대통령이 16일 베를린 자유대에서 디터 렌첸 자유대 총장으로부터 '자유상'을 받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도 북한 핵문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가 임박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상'은 베를린 자유대학이 정치, 사회, 학술훈에서 자유의

이상 실현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수여하기 위해 올해 제정한 것이다.

이전 시상식에는 리하르트 폰 바이제거 전 독일 대통령, 로타르트 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에베르하르트 잔트슈나이더 독일 외교협회 회장 등이 축하사절로 참석했다. /베를린=연합뉴스

"부시, 북핵 해결 뒤 신속한 북·미 수교 원해"

방미 이해진 총리 밝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이후 북미관계를 전면적으로 빨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해진 전 총리가 16일 밝혔다.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방미중인 이 전 총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하일 톨 랜토스 외교위원장과 이날 회동 내용을 언급,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났더니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에 숨겨진 의도가 없으며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안다고 이 전 총리는 말했다.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도 "북한 핵폐기의 초기단계 이행이 완료되면 (5개) 실무그룹 차원에서 의

미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전 총리는 "북한의 최승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방북한 김혁규 의원을 통해 미국에 두가지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뜻을 전했다"며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 시비 걸 일이 아니라는 것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빨리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연합뉴스

피랍선박 소말리아 항구 정박중

정부 당국자는 소말리아 부근 공해에서 15일 발생한 어선 피랍사건과 관련, "17일(이하 한국시간) 중 납치단체 측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납치단체 측에서 오늘 오전 11시 현재까지는 접촉을 해오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피랍선박은 소말리아 남부 라스 아수아드 항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선원들이 배 안에 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납치단체와 직접 교섭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 아래 외교 경로 등을 통해 협상을 촉진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나이지리아서 한국인 1명 실종

한국 근로자 납치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나이지리아 니제르델타 지역을 방문 중이던 한국인 한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외교부상부가 17일 밝혔다.

나이지리아에서 사업을 하는 정 모씨는 지난 12일 주 나이지리아대사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지인 한명과 함께 니제르델타지역을 방문했다가 13일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따라 대사관은 정씨가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니제르델타 지역 경찰과 함께 정씨 행방을 확인 중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니제르델타지역은 여행 경보 단계 3단계인 여행 제한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연합뉴스

www.hanbitgosi.co.kr

2007년 9급국가직/ 서울시/ 경기도/ 광주/전남시험합격 = 함께가요 한빛

7·9급 공무원

★ 공무원 이론반 (2개월 완성)

★ 서울시문제풀이 (1개월 완성)

★ 농업직 이론반 (2개월 완성)

첫진도 개강 6월 1일

마감입석! 예약필수!

역동성의 결정체 = 7/9급 다이아몬드팀 A.B.C반

1공무원학원의 1등 브랜드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부구청장

234-0234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유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직장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처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특강 개설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유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B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주1회 8주 2개월

★교 육 비: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롯데백화점앞 제일B/D 3층

★접수방법: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신청기한 1월 마술교실체험 유치원, 초·중·고학년, 태권도도장, 각·예능학원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화, 교회행사, 야유회

○어떤 행사라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제1회 국가공인자격증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취업 가능...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 부기관이나 사고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교통사고조사 전문가를 말한다. WTO가 입국 중 교통사고와 사망률이 각각 1.2%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정부는 당사자간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진교통사고조사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는데, 이면에 특별공인된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조사하고, 조사 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인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꿔 놓거나 사고현장에 도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사업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가는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되며 신규 고용증가에 대해 법적공인력 부여, 조사자료 증거 채택,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취업가능, 학력·경력 무관 평균 60점 이상 합격

업체와 당국의 관심은 매우 크다.(참고:사고발생 약21만건, 사상자 약34만명, 이의신청분쟁 매년 수천건씩 증가, 이상 2005년 경찰청 발표)

시험과목으로는 교통관련법규 등 4과목 객관식과 실무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고,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학력·경력과 무관하다. 특히, 일반시험에 마땅한 수험교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응시자를 위한 교육원의 안내자료와 특별교육까지 준비돼 있어서, 국가공인 제1회라는 시험특성까지 감안하면 시험 첫해인 올해 유래 없이 많은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탄생될 전망이다.

상담문의/(062)526-5115

자료제공:한국교통사고감정교육원